광주 화물차 위험한 불법주차 여전

주택가·갓길 밤샘주차에 잦은 사고 초래
차고지 운영 유명무실 속 단속도 시늉만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제2순환도로 고가다리 아래 대형화물차가 불법 주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서구 광천동 한 도로는 천변을 따라 밤샘 불법주차된 화물차 수십여대가 매일 방치되고 있다.

북구 운암동 D아파트 정문 앞은 불법주차금지 구역으로 견인지역이지만 이를 무시한 채 굴삭기 한 대가 주차돼 있다.

#. 2009년 10월25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에서 시청 방면으로 가던 김모(54)씨는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광주시 등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다. 5년 뒤인 6일 새벽 찾은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로 가득했다.

#. 광주시 광산구 양동 588-2번지는 화물차·특수차 등 10대가 차고지로 등록해놓은 부지지만 6일 찾아간 차고지는 진입로가 폭 2m에 불과해 사실상 특수차 진입이 불가능한 '이름뿐'인 차고지나 다름없었다.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가 하면, 주택가 곳곳에 불법 주차돼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데도 경찰과 행정당국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경찰과 행정 당국은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강화 방침만 외쳐대고 '반짝 단속'에 그쳐 의지가 없는 '생색내기식'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북구 중흥동 A주유소 앞 길은 밤이면 밤샘 주차해놓은 화물차들이 여전하다.

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경찰과 행정당국의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주택가 불법 주차 문제도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제2순환도로 입구의 경우 매일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의 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 우려 가능성이 상존해 민원도 끊이질 않지만 그 때뿐이다. "(단속) 담당자들이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현재 퇴근을 한 상태라 어쩔 수 없다", "타지역으로 등록돼 있는 화물차는 사실상 조치 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해명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화물차 차고지 문제도 바뀌지 않았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용이 불가능한 농지 등에 명칭만 등록해놓은 차고지 등 졸속으로 운영되는 화물차 차고지 문제를 지적했었다. 1.5t이상 화물 차량의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점을 감안,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한 뒤 주택가에서 밤샘 주차를 선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양동 내 한 차고지는 진입로 폭이 2m 가량에 불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데도 특수차인 트랙터·26t급 트레일러·덤프트럭 등 10대의 차고지 등록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이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화물차운전자 최모(49)씨는 "등록된 차고지가 외각에 있어서 집에 돌아가려면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늦은 시간 퇴근하는데 주차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유류대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차고지 등록을 한 1.5톤 이상 화물차량은 9610대. 일선 지자체 등이 인력 부족 등을 내세워 차고지가 화물차 주차장으로 가능한 지 여부와 실제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을 허가하는 '허점'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대형 화물차 차고지도 비슷하다.

광주시내 대형 화물차 차고지는 ▲각화화물터미널(면적 35,701㎡·면수 270대) ▲매월 화물터미널(〃39,304㎡·〃170대) ▲진곡 화물차고지(〃52,648㎡·〃301대) 등으로 총 741대가 주차할 수 있지만 상당수 화물차량 소유주들은 '서류상' 차고지만 등록해놓고 주택가 밤샘 주차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밤샘주차 단속은 일주일에 1~2회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시간도 새벽 12시~ 4시로 제한돼 있다"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1년(1486건) ▲2012년(1410건) ▲2013년(3876건)등 화물차 불법 주차 단속을 벌였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시험문제 저장 컴퓨터 도난 광산구 초등학교 신고 수사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저장된 컴퓨터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 초등학교 측에서 컴퓨터 본체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이 컴퓨터에는 4학년 학기말 평가 시험문제가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5층 연구실 창문을 통해 누군가 침입한 뒤 컴퓨터 본체를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학교 측은 10일로 예정된 시험문제가 유출됨에 따라 학기말 평기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한 뒤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 힘든 상태"라며 "컴퓨터 고유번호를 식별해 위치를 파악하는 방안을 활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웅기자 pboxer@

안마받다 골절 누구 책임이냐

경찰, 사라진 마사지사 추적

태국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에 사는 정모(51)씨가 "최근 태국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왔다는 것이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밤 9시30분께 광산구 쌍암동의 한 태국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고서 왼쪽 갈비뼈 부근에 통증을 느껴오던 중 참다 못해 지난 1일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다.

병원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왼쪽 6번 갈비뼈가 부러져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

정씨는 경찰에서 "베트남 여성 안마사가 순간 너무 세게 밟은 탓에 욱하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바로 그때 내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해당 마사지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주 측은 "마사지 도중에 이렇게 뼈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마사지를 했던 여직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탓에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사나 업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정씨의 갈비뼈 골절과 마사지와의 인과관계를 입증돼야 한다"면서 "마사지사도 사라진 상황에서 피해자마저 마사지를 받고서 1주일이 지난뒤 병원 진단을 받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사랑의 김치' 동네 인심 살아있네

동네 인심은 아직 살아 있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청죽골 식당 주인 김만식씨 부부와 주민 30명은 7일 하루 동안 동네 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할 1만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김씨 부부와 용봉동 주민들은 8년째 사랑의 김장 행사를 갖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도교육청 재정 한눈에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개통

교육부는 8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모아놓은 인터넷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 알리미'(http : //www.eduinfo.go.kr)를 개통한다.

이 홈페이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보검색 기능을 제공해 연도별·교육청별·항목별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 정보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기관과 인력 현황, 의존재원, 재원별 세입, 사업별 세출, 인력운영경비, 학교회계전출금, 학생1인당 교육비 등 17개 분야 70여개 항목이다. 특히 기간제교사 운영, 학교회계직원 인력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홍도·흑산도 어민 "중국 어선 어구 절도 막아주오"

태풍 피항왔다 통째 끌고가 "피해액 수천만원대" 하소연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 뿐만 아니라, 홍도 홍어잡이용 어구(주낙) '절도' 행각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인데도, 해경 등 당국이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홍어잡이가 개시된 지난 7월 이후 중국 어선들의 어구 절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홍도·흑산도 어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안 선적 한성호 선장 이상수(51)씨는 7일 홍도 서방 22㎞ 지점에 설치해 둔 주낙 수십 고리를 분실하는 등 최근 한 달간 홍도 앞바다에 설치해 둔 주낙 수천 고리를 도난당해 5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흑산도 어민 김영창(78·21t급 서광호 선주)씨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어치 이상의 어구를 도난당했다.

홍어잡이 어선은 주로 날씨가 좋은 날 홍도 앞바다에 주낙을 500~1000고리씩 설치 한 뒤 3~4일이 지난 후 어구를 거둬들인다. 고리 당 450여 개 씩 달려 있는 바늘은 수심 50~70m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

홍도·흑산도 어민들은 "지난달 이후 중국 어선에 의해 어구를 도난당한 사례만 10건도 넘는다"면서 "어민 한 명당 1~3차례씩 어구를 도난당해 피해액만 1000만~7000만원에 달하는 등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중국 쌍끌이 어선들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업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해 둔 어구를 통째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단속에 나서야할 해양경비안전서는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민들 사이에서는 신고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불신감도 팽배하다.

흑산도의 한 어민은 "최근 기상 악화와 해경 해체를 틈타 떼로 몰려든 중국 어선이 홍어잡이 어구를 통째로 쓸어가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한 어민은 "해경에 신고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하러 신고를 하겠느냐"면서 "홍도 앞바다가 대한민국 바다인지 중국 바다인지, 답답해 죽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신안=이상선기자 sslee@

"교도소 가려고…"어설픈 은행털이

쌍나팔

○…교도소에서 사용할 현금 수백 만 원을 마련해놓고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은행털이에 나선 어설픈 강도가 경찰서행.

○…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35)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동구 A은행에서 직원 이모(52)씨에게 "나는 강도다.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한 뒤 흉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것.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는 박씨는 이씨 등 은행 직원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나를 뒷조사하는 국정원을 피해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 교도소에서 쓸 돈은 있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자 은행털이에 나섰다"며 횡설수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18061	1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마을현진에버빌1단지 105동 7층 702호 146.44㎡	아파트	406,000,000 406,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4타경 12193	1	나주시 왕곡면예향로3304-2 62.3㎡[현황관리사]주택53㎡[사정면적11.47㎡]주택[현황주택및창고]39.90㎡ 축사[현황창고]105㎡[사정면적116.08㎡]제시외 주택 등134.92㎡	관리사	26,656,130 26,656,130	건물만매각,제시외건물포함
2014타경 15628	1	광산구 비아동 60-29 643㎡	대	264,317,620 264,317,6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광산구 비아동원촌길 85-24 61.87㎡ 제시외 주택 등 260.68㎡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8200	1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663 1987㎡	전	187,464,000 187,464,000	일괄매각,목록1,4,5,7,9,10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외철파이프구조하우스소재,목록2매각외건물소재
		동소 676-4 6308㎡[현황전]	임야		
		동소 676-6 1369㎡[현황전]	임야		
		동소 676-7 1696㎡	전		
		동소 676-8 3226㎡	전		
		동소 676-9 370㎡	대		
		동소 677-1 618㎡	전		
		동소 677-2 648㎡[현황전]	임야		
		동소 678 1808㎡	전		
		동소 678-2 1200㎡	전		
	2	나주시 운곡동 150-25 916㎡	전	13,648,400 13,64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5628	3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748 717㎡[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33,481,200 33,481,200	일괄매각,매각대상아닌수목소재
		동소 산145 2157㎡	임야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4타경 15628	4	동소 749 3222㎡	답	52,902,600 52,902,600	일괄매각,매각대상아닌수목소재
		동소 750 2188㎡[물건번호4: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14타경 17631	1	당양군 당양읍 백동리 268-6 370㎡[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전	83,250,000 83,250,000	
2014타경 18634	1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124-9 1464㎡	답	34,732,000 34,732,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24-10 364㎡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4타경 16263	1	나주시 금성동 14-2 원당빌딩 2층 201호 347.87㎡	근린시설	413,000,000 413,000,000	
	2	동소 14-2 원당빌딩 3층 301호 347.87㎡	근린시설	325,000,000 325,000,000	
[기타]					
2014타경 15628	2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744 462㎡	대	202,085,010 202,085,0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6,11매각대상아닌수목소재,목록6-8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장성군 서삼면 편백로 156 167.87㎡ 제시외 교회 등 82.1㎡	장실및관리사		
		동소 156 1호 71.32㎡	주택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745 3276㎡	답		
		동소 746 3300㎡	답		
		동소 747 392㎡	답		
		동소 산148 3273㎡	임야		
2014타경 16881 2014타경 18733 [중복]2014타경 19699 [병합]	1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302-6 4533㎡	공장용지	1,402,246,410 1,402,246,41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기계기구목록포함[일부소재불명],공장지당법제6조목록참조
		동소 302-6 가동호 617.19㎡ 제시외 창고 291㎡,기계기구목록참조	공장		
		동소 302-6 나동호 360㎡	공장		
		영광군 군서면관산로297-15다동호137.05㎡	공장		
		동소297-15 라동호1층205.92㎡ 2층174.6㎡	공장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302-50 329㎡	임야		
		동소 302-52 2822㎡	임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사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4. 12. 23.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12. 30.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가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종료가 선언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여,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입수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등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별한 기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하거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근심없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